

## 정책제언

지방자치의 제2도약(자치분권 2.0)을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발전적 고찰

최 진 혁 |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제헌헌법에 보장되어 제정된 지방자치법(1949.7.4.)에 의해 비롯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집권자의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국가행정의 능률성 도모를 위해 유보당하는 역사적 시련을 겪으면서 진전되어 왔다. 즉, 헌법에 지방자치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의 창출에 유리하게 활용할 뿐이었고, 나아가 중앙집권적 행정국가의 틀 속에서 헌법에 보장한 지방자치제를 헌법부칙을 두어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 통일 시까지 유예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그 시기를 법률로써 정할 것을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정치권으로부터 정권유지나 권력의 도구로 전락되었던 우리의 지방자치는 1987년 6.29 민주화 항쟁 이후 마침내 대통령직선제로의 헌법 개정을 보게 되었고, 지방자치를 유보하게 했던 헌법부칙조항도 삭제하게 되면서 제3공화국 이후 시행하지 못했던 지방민주주의의 보루인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1991년 지방의회를 재구성하고 당시 임명제였던 자치단체장을 1995년 주민직선으로 획기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게 하였다. 그러나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를 추구하지 못했고, 중앙정부와 정치권력의 필요성에 의하여 그들의 정쟁게임 하에서 지방자치를 시행하다보니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주민자치)와는 거리가 먼 제도로 진전·왜곡되어 왔던 것이다.

여전히 중앙의 정치논리와 국가행정의 우위성에 입각한 효율적 행정논리에 따른 ‘중앙집권방식’으로의 지방자치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동안의 지방자치제의 한계를 인식하여 문재인 정부는 정권브랜드로서 평가받고자 했던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제들을 보다 발전적으로 계승해가고자 하는 의지를 펼치면서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의 핵심적 가치를 주민주권(주민참여권 보장, 확대)과 다양성(선택적 자유 확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공동체(협력적 제도개선)에 두고, 이를 반영할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0.12.9 ; 2022년 1월 13일 효력발생)을 보게 된 것이다.

즉, 주민자치의 새로운 지표설정으로 획기적인 주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규정에는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고, 제17조에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함으로써 주민이 권력의 원천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그동안 획일적으로 운영해왔던 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기관분립형)도 다양성을 존중하여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해당 지역에 맞게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행·재정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할 자치단체에게 보다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해 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원칙을 명확히 하였고(제11조),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기존의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였으며, 시·도, 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자율성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규정을 신설한 것과,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기존의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고자 하였고, 자치단체의 사무수행에서 능률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단체장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인수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교통·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었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특례를 확대해 가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제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서 기여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규정들이 단체자치의 법체계 안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한계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이는 자치법의 규정에서 “...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다수이고, 또한 자치단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및 조정역할에서 상위정부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자치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차원에서 내 놓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통제가 자치행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종전까지는 시·도가 시·군·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그에 따른 취소·정지권을 발동하지 않을 경우 국가(중앙정부)가 관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국가의 기초단위까지 통제의 고리를 연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수행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 것이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 전부개정안은 그간 국가중심의 자치에서 주민중심의 자치로 제도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지난 39년 지방자치의 소중한 경험과 값진 교훈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런 배경에서 진정한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해하여 주민주권의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동반자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자치분권의 재설계를 도모하여 중앙정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장악하여 국가발전을 이끌어내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발전 행정론이 아니라 각각의 자치단체가 각자의 여건과 능력에 맞는 자치역량을 키워내 주민주권자인 주민에게 실익이 돌아가게 하는 지방분권적 자치행정으로 국가발전을 이루어내는 행보로 전진해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자치분권위원회\_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정부동향

행정안전부

##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 13개 부처 소관 36개 법률 개정을 통한 획기적 권한이양 추진 -

- 행정안전부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을 위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12개 법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12개 법안은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소관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13개 부처 소관 36개 법률 개정을 통해 26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예정이다.
    - \* (부처별 일괄법) 부처별로 법안을 발의하되 부처 소관 법률이 2개 이상인 경우 일괄법 형식으로 법률을 모아서 제출하는 방식(단 질병청 소관 법률은 복지부 일괄법에 포함)
  - '21. 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법안은 '21.7월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을 토대로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 자치분권위 심의·의결안은 48개 법률 166개 사무를 포함하였으나, 이양 필요 연계사무 추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결과에 따라 법률·사무수 변동
  - 이번에 이양 대상으로 확정된 261개 사무에는 전체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되는 사무(201개)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특례시 사무(21개)\*,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39개)\*\*도 포함되어 있다.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15개), 관광특구 지정·평가(5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1개)
    -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등록 등(17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 등(5개),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행(4개) 등
  - 구체적으로는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행·재정 지원 권한(국가, 시·도 → 국가, 시·도, 특례시), 2) 관광특구 지정 등 권한(시·도 → 시·도, 특례시), 3) 이력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권한(국가 → 국가, 시·도), 4) 감염자 격리시설 지정 등 권한(시·도 → 시·도, 시·군·구), 5)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재개발 권한(국가 → 시·도) 등이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이 1월 중 국회에 제출되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8개 상임위에서 신속히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 또한 법률 시행(공포 후 1년 6개월) 전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이양사무 비용평가 및 지원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법무부

##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

-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2022. 2. 1.부터 2025. 3.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방안 》

- 기존 대상
  - 국내에서 출생하여 15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 확대 대상
  -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에는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 또는 영·유아가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 또는 영.유아기가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 학습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하여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 교육부 통계상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하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으로, 이번 대상 확대로 그 중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일자리와 청년, 중장년 취업 수요 연결 지원

□ 중소기업부는 1월 26일 구직·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 구직자와 중소기업간의 일자리 연결을 위해 `22년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업인력애로센터) 구직자와 구인 중소기업의 일자리 연결오류(미스매치) 해소와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해 중진공 16개 지역본부가 운영하는 맞춤형 '일자리연결체제(일자리매칭플랫폼)'

□ 지난해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청년, 중장년 등 다양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취업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해 1,630개사의 중소기업에 3,080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취업 중소기업 업종은 제조업(41.6%), 정보통신업(17.4%), 도소매업(10.9%) 순이며, 청년층(76.8%)과 중장년층(23.2%), 수도권(53%)과 비수도권(46%)의 비율로 채용됨

###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 내용》

○ 구직자 취업상담(컨설팅) 및 취업연결(매칭) 지원

- 중소기업 취업희망 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사가 취업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정책자금, 수출 등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에 취업까지 지원한다.
- 올해는 신산업과 지역주력산업 중심으로 일자리 연결(매칭)을 강화하고, 지난 1.5(수) 개통한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연결체제(일자리매칭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맞춤형 구인·구직 지원서비스\*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 \* 전문상담사 연결(매칭), 인공지능(AI)추천 연결(매칭), 구인·구직자 직접 연결(매칭) 등 연결(매칭)방식 다양화
  - \* 인공지능(AI)모의면접, 인적성검사, 엔씨에스(NCS)기초능력검사, 일자리박람회 체제(플랫폼) 제공 등 취업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 대기업의 우수한 교육·훈련 기반(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협력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 (사업단) 10개 사업단(대·중견기업+협력사) 190백만원 내외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청년) 교육기간 내 주 10만원(최대 8주 80만원) 훈련수당 지원
- 올해는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정보기술(IT), 반도체, 소프트웨어(SW), 생명(바이오)산업 등 신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사업단의 참여를 확대해 취업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 현장지도(코칭) 숙련인력 양성·공급

- 명장 등 기술·경영 전문가가 구직자에게 현장에 특화된 1:1 현장지도(코칭)과 실습을 집중 지원해 숙련인력으로 빠르게 정착하도록 돕는다.
- 올해는 숙련기술 축적이 필요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전문가의 코칭 품질도 평가해 사업의 효과도 높일 예정이다.

○ 지능형(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묶음(패키지) 지원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중심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취업매칭-지능형공장 직무교육'까지 일괄 지원한다.
  - \* (기업) 인건비 60만원(최대 3개월 180만원), (인력) 교육 참여보조비 20만원(최대 3개월)
-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2배로 확대(7억원 → 15억원)해 더 많은 기업과 구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정책브리프

# 코로나19 이후 일·생활 균형 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에 대한 국민 요구 높아

노동·돌봄 분야 양성평등 정책 국민인식 조사 결과

 김 원 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 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1년 12월 ‘노동/가족분야 양성평등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양성평등정책 분야 중에서도 중요성이 큰 노동 분야와 돌봄 분야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양성평등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구체적으로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이후 일자리 질 격차 전망, 코로나 시기 일·생활 균형제도 사용 변화,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우선과제에 관한 내용을, 돌봄 분야와 관련해서는 돌봄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의견, 돌봄 분야 정책 우선과제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음
- 이 글은 주요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관련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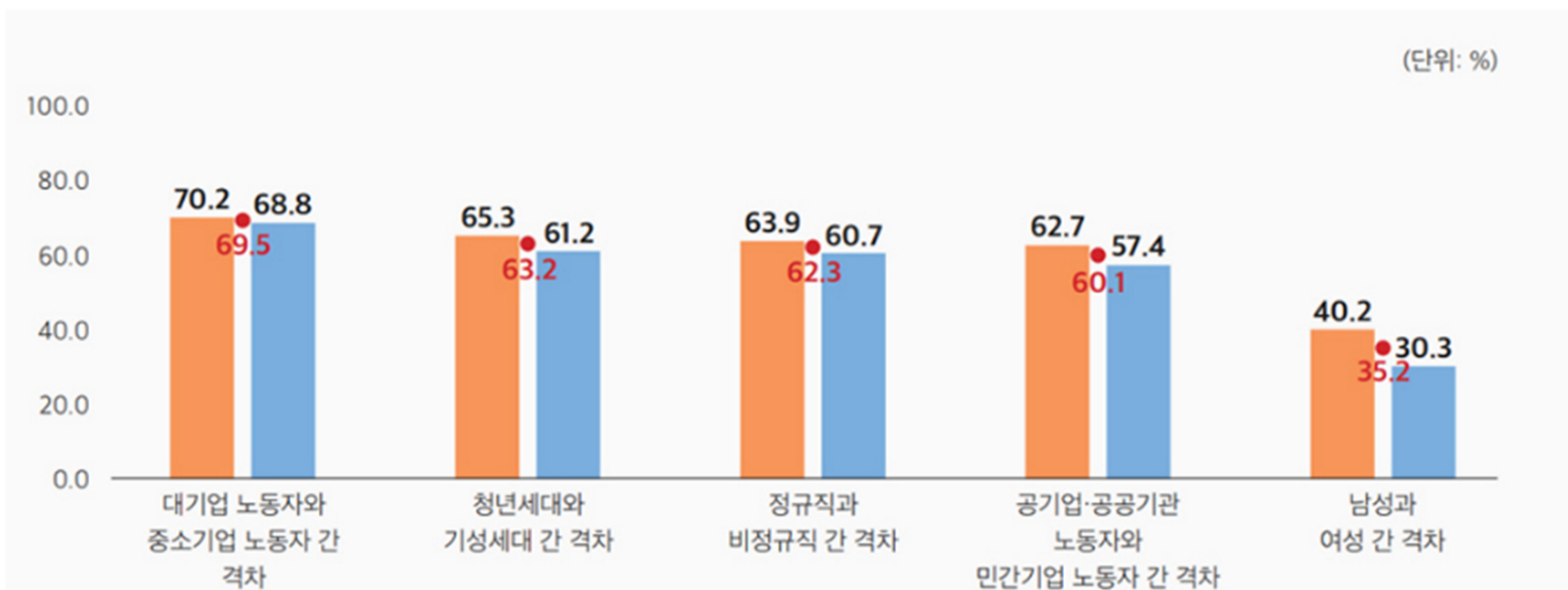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 만 18세~69세 성인 남녀
표본수	2,000명(남성 1,015명, 여성 985명)
표본추출	2021년 11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p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21년 12월 13일(월)~12월 15일(수)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 ◦ 노동 분야

### ◆ 코로나 이후 일자리 질 격차 전망

- 10명 중 6명 이상이 코로나 이후 대기업/중소기업 간, 청년세대/기성세대 간, 고용형태 및 종사부문에 따른 일자리 질(임금, 고용안정 등)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함. 특히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간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가장 높았음 (69.5%)

• [그림 1] 코로나 이후 일자리 질(임금, 고용안정 등) 격차 심화에 대한 동의 비율





■ 여성 ■ 남성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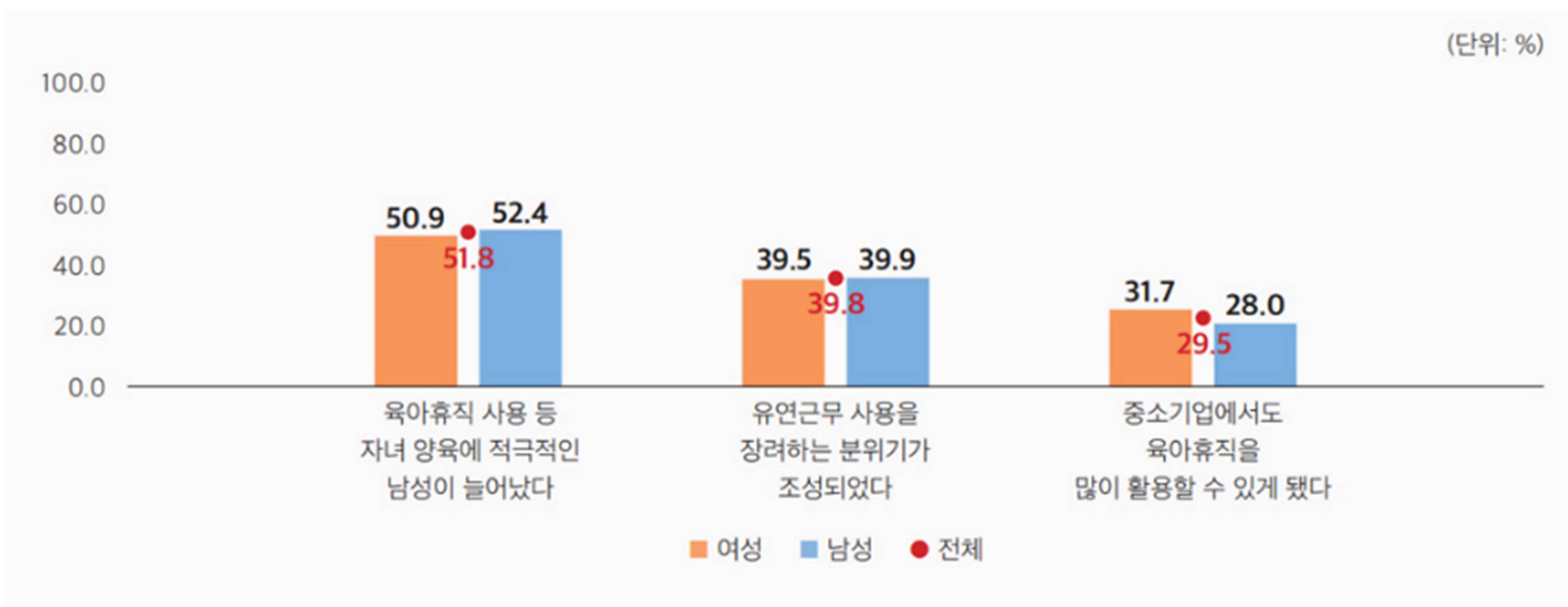
해당 격차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와 '약간 더 커질 것이다' 응답을 합친 값임

- 5개 문항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동의 비율이 높았고 동의 비율 차이는 약 1.4%p~9.9%p로 나타남. 특히 동의 비율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남성과 여성 간 격차로 성별 격차의 당사자인 여성이 일자리 질 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함(남성보다 여성의 동의 비율이 9.9%p 높음).

◆ **코로나 시기 일·생활 균형 제도 사용 변화**

- 응답자 중 임금노동자들은 코로나 시기 자녀 양육에 남성 참여는 다소 확대되었으나 유연근무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 중소기업에서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함.

● [그림 2] 코로나 시기 일·생활 균형 제도 사용 변화에 대한 동의 비율



\*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을 합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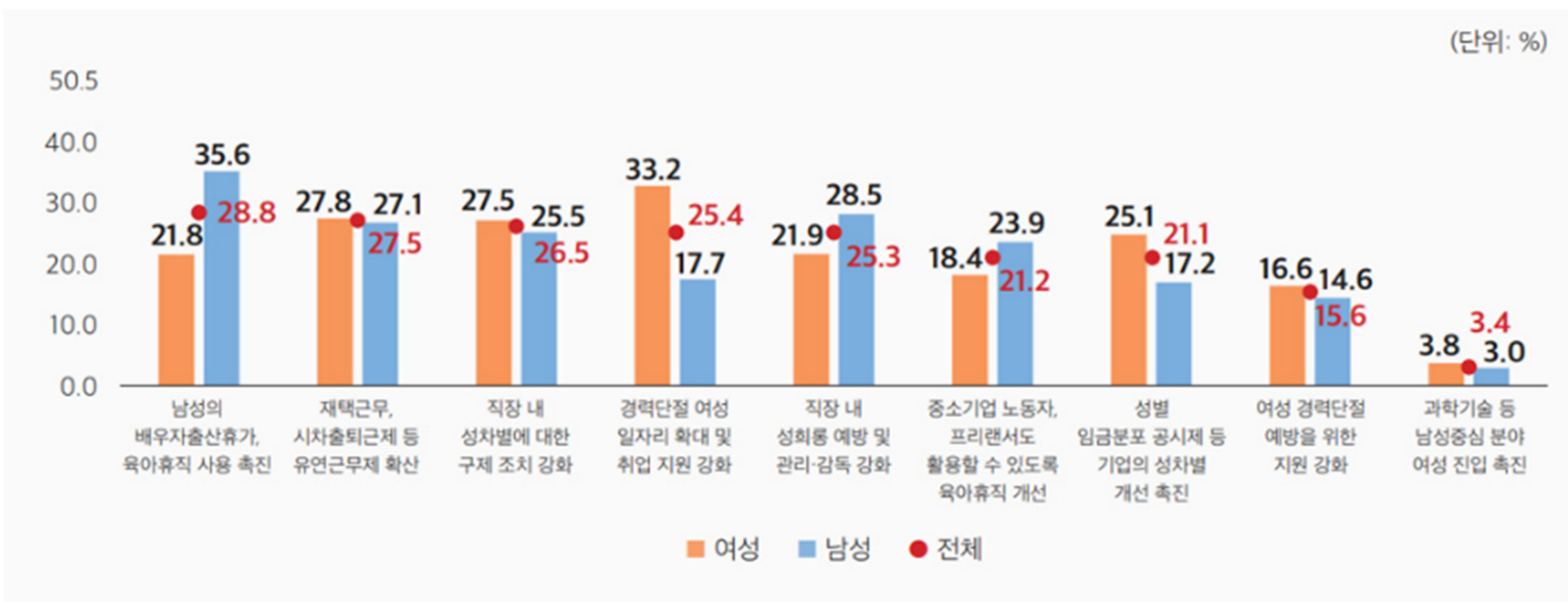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2,000명 중 임금노동자 1,200명만 답변

- 3개 문항 모두 성별 동의 비율 격차가 3.7%p 이내로 성별 인식 격차가 두드러지지 않음. 여성과 남성 모두 자녀 양육에서의 남성 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이 동의하였으나, 유연근무 사용 장려 분위기, 중소기업에서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대해서는 10명 중 약 3~4명만 동의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함.

◆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

-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우선 정책 과제로 남성의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촉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연근무제 확산,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구제 조치 강화,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등이 중요하게 나타남.

● [그림 3]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



\* 각 정책 대안을 '1순위' 또는 '2순위'로 선택한 응답을 합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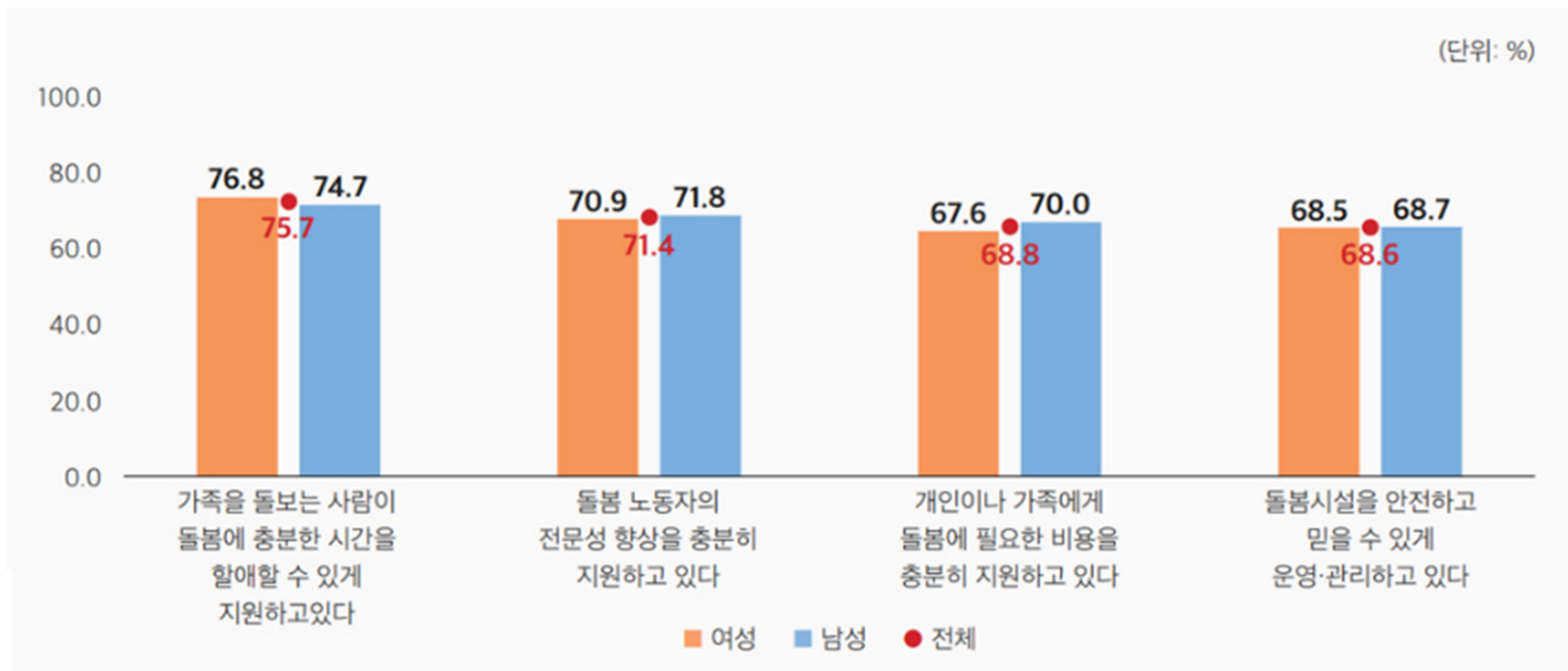
- 9개 정책 대안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에서 성별 격차가 발견됨. 여성은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33.2%), 남성은 '남성의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35.6%). 이처럼 여성과 남성 모두 각각 해당 성별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과제를 1순위로 꼽았음. 한편, 유연근무제 확대(여성 27.8%, 남성 27.1%)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응답 비중이 높아 코로나 이후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환경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확인함.

## ○ 돌봄분야

### ◆ 돌봄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

- 10명 중 약 7명이 가족 돌봄 지원, 돌봄 노동자 전문성 향상 지원, 돌봄시설의 안전한 관리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돌봄 지원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함. 특히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돌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의 정부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가장 높았음(75.7%).

• [그림 4] 돌봄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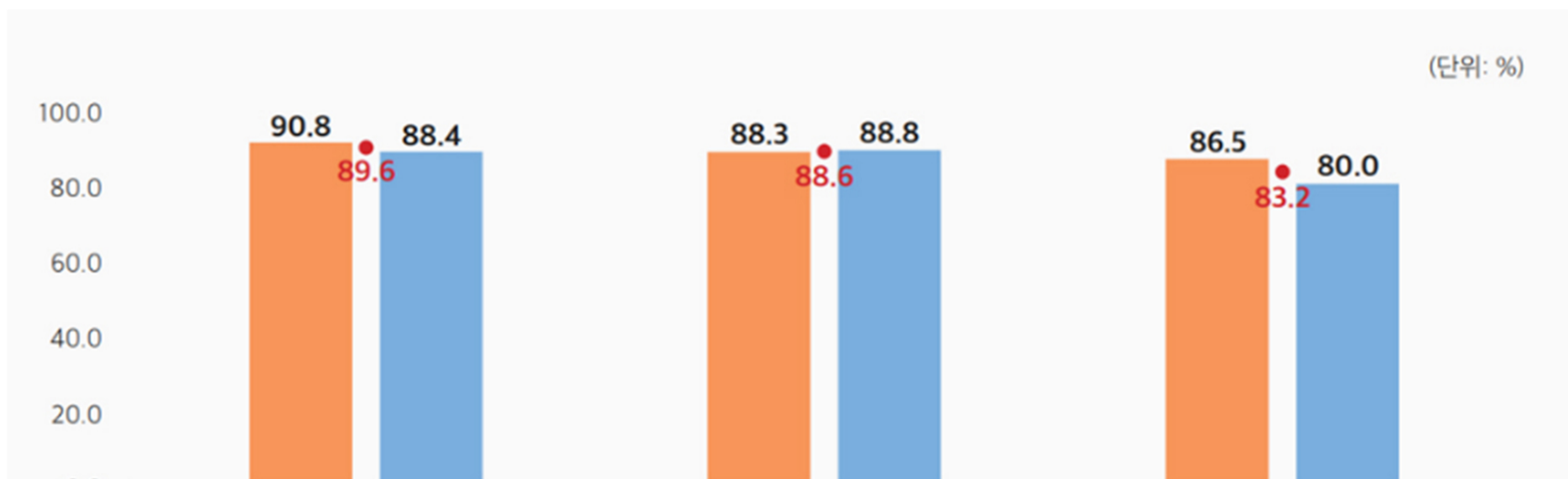
\*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 응답을 합친 값임

- 4개 문항 모두 성별 동의 비율 격차가 2.4%p 이내로 성별 인식 격차가 두드러지지 않음. 여성과 남성 모두 돌봄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함.

### ◆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의견

- 10명 중 8명 이상이 돌봄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 공공기관 직접 고용 등 지위 및 처우 개선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돌봄 노동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기본임금 기준 마련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음(89.6%).

• [그림 5]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의견





<p>돌봄 노동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기본 임금 기준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p>	<p>감염병 시기 돌봄 노동자가 평상시와 달리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p>	<p>재난 시기에 필수적인 돌봄 인력을 안정적으로 투입하려면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을 늘려야 한다</p>
<p>■ 여성 ■ 남성 ● 전체</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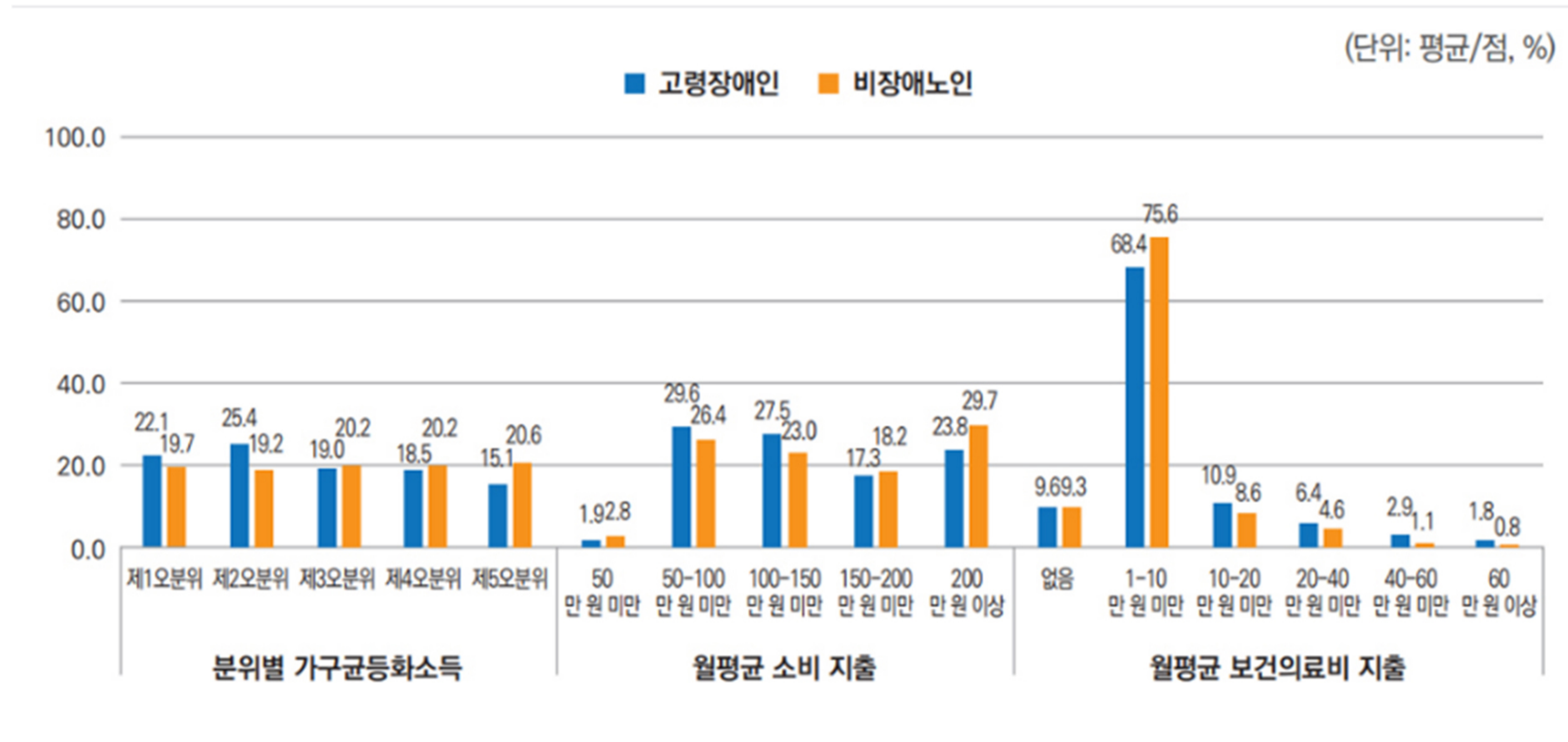
\* ‘약간 찬성’과 ‘매우 찬성’ 응답을 합친 값임

- 여성과 남성 모두 동의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 확대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동의 비율이 6.5%p 더 높게 나타남.

◆ 돌봄 분야 정책 과제

- 우리사회에 필요한 돌봄 관련 우선 정책 과제로 감염병 시기에도 필수적인 돌봄서비스의 유지와 안정성 강화(31.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적 돌봄시설 확충(30.5%),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지원 강화(29.0%),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28.1%) 등이 중요하게 나타남.

● [그림 6] 돌봄 분야 정책 과제



\* 각 정책 대안을 ‘1순위’ 또는 ‘2순위’로 선택한 응답을 합친 값임

- 8개 정책 대안 중 여성은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지원 강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33.1%), 남성은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적 돌봄시설 확충’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33.0%).
-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수행하는 만큼, 가족 내 돌봄 제공자를 지지·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여성의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마치며

- 코로나19 시기 일자리 위기를 겪으며 많은 국민들이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일자리 질 격차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코로나 이후 일자리 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높았음.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일자리 질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인식함.
- 일자리 회복 과정에서 기업규모별, 세대별, 고용형태 및 종사 부문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취약 일자리 질 개선,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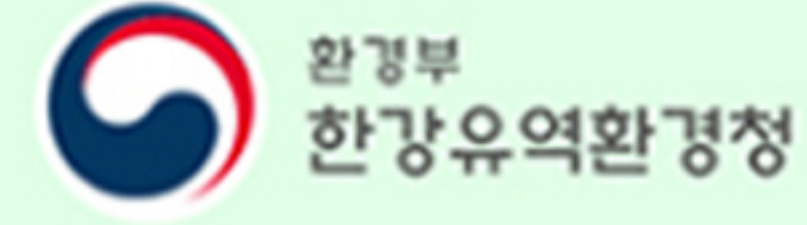


- 장기간의 돌봄 위기로 인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환경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에서의 격차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됨
  -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우선과제로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촉진, 유연근무제 확산 등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우선순위 인식에서 성별 격차가 있었으나 유연근무제 확대(남성 27.1%, 여성 27.8%)는 남녀 모두 응답 비중이 높았음.
  - 그러나 코로나 시기 유연근무 활성화 정도나 중소기업에서의 육아휴직 활용도 제고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높아,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의 보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문화적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줌
-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감염병 위기 시에도 안전하게 운영하는 공적 돌봄의 필요성,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를 고려하여 사회적 돌봄 인프라 확충이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적정 임금 보장, 안정적인 돌봄 인력 투입을 위한 직접 고용 확대에 대다수가 찬성하였고, 돌봄분야 정책 우선과제로 필수 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공적 돌봄 시설 확충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향후 돌봄정책 추진 시 이처럼 공적 돌봄 시설 확대, 돌봄노동자에 대한 보상 및 처우 개선 등 사회적 돌봄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임.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brief\_김원정 성평등 전략사업 센터장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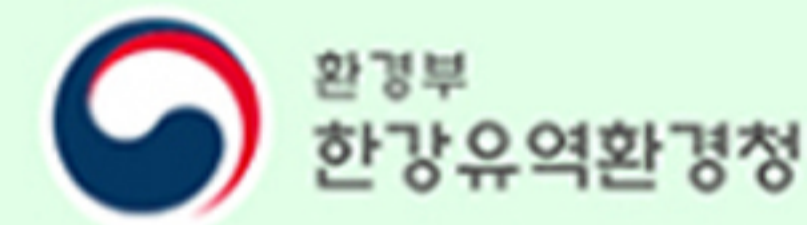


알기쉬운 정책용어



# 그린워싱이란?

그린워싱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합니다!



## 환경표지제도과 환경부 인증 마크 확인

환경부에서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사 위원회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수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 구매시에는 꼭 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알기쉬운 정책용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 제품 생산 모든 과정이 친환경! 환경 성적 마크

환경 성적 마크는 제품의 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 등의 과정을 모두 점검하여 인증 받은 제품에만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환경적 정보를 공개한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성이 높습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 친환경 실천의 첫발걸음 탄소 발자국 인증 마크

특히 눈여겨볼 것은 바로 탄소 발자국 인증 마크인데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의 양을 표시하여 저탄소 제품을 쉽게 판별하기 용이합니다. 녹색소비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알기쉬운 정책용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 재활용 제품에 대한 편견은 그만! GR마크

자연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쉽지만,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재활용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재활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럴 땐 'GR'마크를 확인하시면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 받은 재활용 제품은 신뢰성도 더욱 높아지겠죠?**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 사용하는 에너지는 건까만별! 에너지 절약 마크

에너지 절약 마크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에 따라  
**절전 기준으로 만족하는 제품임을 정부로부터 인증 받아야만**  
**부착**할 수 있는데요, 이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무려 30~50%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